

공 개



의안번호	제 250 호 (2021년)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1. 19. (제 2 차)	

(주)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2. 1. 19.

1. 의결주문

(주)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이 적발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고자 함

3. 검사결과 지적사항

가. 투자광고 규정 위반

- (주)에임 :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건의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0차, 제33차 제재심의위원회(2021.9.2., 9.30.) 심의필

<별지>

(주)에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에임 :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건의

- 조치사유

· 투자광고 규정 위반

- 법적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 제57조(투자광고), 제449조(과태료)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제60조(투자광고), 「금융투자업 규정^{*3}」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1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2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3 2021.3.2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2. 조치사유

가. 투자광고 규정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대통령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으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주)에임은 'XX.X~'XX.X.XX. 기간 중 △△△, ☆☆☆, 자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APP), TV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투자자문 업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주)에임은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금융투자협회의 사전심사, 심사필 표기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 'XX.X월 어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한 후 투자자문 상품을 홍보하고, 'XX.X월부터 △△△에 투자광고를 게시하였으며, 'XX.X월부터 자사 홈페이지(saving.getaim.co)에서 'SAVING' 상품 홍보글을 게시하였고,
 - 'XX.X.X.~'XX.X.XX. 기간중 ♡♡♡♡과 ☆☆☆에서 투자광고를 송출하고 자사채널에 투자광고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XX.X.XX.~X.XX. 기간중 XX개 TV채널을 통하여 X천회 이상 투자광고를 송출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관계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제57조(투자광고)**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
- ② 금융투자업자(제1항 단서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서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의2. 제57조 제6항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 제60조(투자광고)** ①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금융투자상품의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버. 법 제57조 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25의2	100백만원

□ 舊 「금융투자업규정」 (2021.3.2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11조(투자광고 포함사항) ①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타 기관 등으로부터 수상, 선정, 인증, 특허 등(이하 이 호에서 "수상등"이라 한다)을 받은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 당해 기관의 명칭, 수상등의 시기 및 내용
2. 과거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을 표기하는 경우 투자광고 시점(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3.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대비용과 최대수익을 표기하는 경우 그 최소수익
4. 관련법령·약관 등의 시행일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전에 실시하는 광고의 경우 투자자가 당해 거래 또는 계약 등의 시기 및 조건 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
5.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출처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항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② 협회는 투자광고를 하는 자, 투자광고의 내용, 투자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투자광고 기준, 투자광고 심사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2-35조(투자광고의 정의) ① 이 장에서 “투자광고”란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 등 관계법규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
 - 나. 설명회 세미나 개최 안내
 - 다. 투자유인 문구나 구체적인 추천 상품명이 포함되지 않는 시황 업황의 분석 및 전망
 - 라.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전체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목록·편람으로서 투자유인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것
 - 마.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안내
3.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현황이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융투자회사가 운용 또는 판매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수·수수료,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행위(객관적 통계를 기초로 추출한 정보를 보여주면서 선정기준 및 정렬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6조(투자광고의 공정성 확보) ②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7조(의무 표시사항)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2-42조제1항제6호 본문의 투자광고, 휴대전화·라디오를 이용한 투자광고, 별표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일부 매체의 투자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투자광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투자광고에 표시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38조(금지행위)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다만,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이 보전되거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나.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6.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비교대상이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15. 별표 10의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에서 열거하는 행위

제2-39조(온라인 투자광고) 금융투자회사는 인터넷 매체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별표 10-1의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2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점검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6. 단순히 금융투자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회사에 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는 제외한다.

가. 방송

나. 신문 등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광고물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 승인 내역을 별지 제11호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5조(부당한 광고의 사용금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2. 협회가 적격 통보하였거나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한 투자광고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투자광고. (단서 생략)
3.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투자광고

제2-47조(심사필의 표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은 사실과 제2-46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협회가 적격으로 통보한 투자광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호 (20 . .)” 또는 별지 제14-2호에 따른 엠블럼
2.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만으로 시행한 투자광고: “OO회사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호 (20 . .)”

[별표 10]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관련 금지행위

1.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 가. 고객 등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행위
- 나.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영위업무 등을 비방하는 행위
- 다. 관계법규, 협회의 정관·규정, 그 밖에 자율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 라. 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개정 2012.3.9)
-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건전한 투자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저,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다. 특정시점, 특정기간 또는 특정구간에 해당되는 사항을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표시하는 행위

- 라.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마.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행위
- 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허위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3. 다른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

- 가. 우월성 부각을 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비교하여 표시하는 행위
- 나. 부분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 다.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우월성을 과대표시하는 행위
- 라. 객관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보다 우월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4. 투자자로 하여금 잘못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광고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나. 제휴회사 등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자신이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다. 상품결합광고를 하면서 상품결합을 강제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라. 절세금액을 상품 자체의 성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투자자 오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바. 그 밖에 자율규제위원회가 부당한 비교표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별표 10-1] 온라인 투자광고 심사기준

1. 온라인 투자광고의 종류

- 가. 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시스템(HTS, MTS 등),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투자광고
- 나. 소셜미디어 광고: 소셜미디어 등(가입자간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미디어로 글자수 또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온라인 매체)을 이용한 투자광고
- 다. 검색광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 시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및 주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광고문구 등이 표시되는 투자광고
- 라. 배너광고: 주로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도록 한정된 공간에 이미지, 플래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 마. PUSH 메시징 광고: 이메일, 메신저, 알람 등을 이용하는 투자광고
- 바. 이용후기 광고: 금융투자회사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온라인 매체에 이용후기 등을 게시하는 투자광고
- 사. 기타 온라인 광고: 기타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광고

2. 온라인 투자광고 종류별 심사기준

종류	심사기준
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제2-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협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온라인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의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 의무표시사항 등은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셜미디어 광고,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면이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나. 홈페이지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회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공간을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실질적인 게시 및 삭제 등 관리 권한을 가지고 이 사실을 노출할 경우에는 자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로 인정하여 제2-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다.
다. 소셜 미디어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실적, 투자자 유형별 상품 추천 등 투자유인성이 높은 표현의 경우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 또는 준법감시인 사전심사가 완료된 이미지 파일(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은 본문에 게시할 수 있다. ○ 제2-47조제3항에 따라 자사가 운영 중인 매체 내 광고물은 심사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색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등 단순한 정보제공은 제2-3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수료 행사 및 이벤트 안내 등 투자유인성이 높은 투자광고의 경우 제2-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협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2-47조제3항에 따라 심사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배너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형 배너광고의 경우 해당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에 제2-37조 및 제2-40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결화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그 밖의 배너광고의 경우 제2-37조 및 제2-40조에 따른 의무표시사항 및 준수사항을 해당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2-47조제3항에 따라 심사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바. PUSH 메시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 광고의 경우 제2-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협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종류	심사기준
광고	○ 제2-47조제3항에 따라 자사가 운영 중인 매체(단, 이메일은 제외)를 통한 광고물은 심사필의 표시(유효기간 포함)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이용 후기 광고	○ 금융투자회사가 제2-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협회에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해당 게시물에는 금융투자회사에서 대가를 받고 작성하였다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게시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시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투자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 온라인 광고	○ 동영상 공유 매체를 통한 광고시에는 협회 사전심사가 완료된 투자광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상기 매체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투자광고의 경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심사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별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그 위반한 행위에 대한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기관경고

나. 위법·부당행위로서 그 동기·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정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정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정 사유

-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정할 수 있다.
- (8) 삭 제 <2017.10.19>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7.25>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 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산운용과	자산운용검사국
연락처	02-2100-2663	02-3145-7635